

젊은층 떠난 마을...해수욕장 안전요원도 구인난

전남 53곳 246명 필요한데 자격증 보유자 218명...보조요원으로 충당 숙소 제공하고 일당 높여 모집...인원 미달에 규정 바꿔 재공고하기도 계곡 안전요원 배치 법 규정 없고 2030 지원 안해...안전대책 개선 필요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 해수욕장과 계곡, 물놀이장 등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도, 정작 젊은층 인원이 많지 않고 있는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안전관리요원 한 명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계곡과 물놀이장 등지에서는 수상 안전 관련 자격증도 없는 '무늬만' 안전관리요원들로 현장을 지키는가 하면, 이마저도 50~60대 고령층이 많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전대책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12개 시·군에 해수욕장 53곳에 대한 위험성 평가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들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요원은 246명이다. 시·군은 이같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6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 운영 중인데, 정작 218명만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고시·제11조)에 따른 관련 자격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4명은 고흥·완도·신안 지역에서 지침에 맞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지 못해 '보조 요원'들로 숫자를 채웠다.

보조 요원은 각 물놀이시설 관리청이 별도 지정하는 요원으로, 안전관리요원이 갖춰야 하는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자격증이 없어도 운용할 수 있다.

신안군은 지난달 24일 해수욕장 10곳에 대한 안전요원 38명을 모집 공고했다가, 이달 7일 인원 미달로 재공고를 했다. 재공고 시에는 '물놀이 안전요

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내용이 추가됐다. 완도군도 지난 5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관련 40명을 선발한다고 공지했다가 한달 뒤 미달된 14명을 뽑기 위한 2차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 거주자로는 안전관리요원을 뽑을 수 없어 타 지역민에게 숙소를 제공해 가며 요원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곡, 물놀이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채용은 더 어렵다. 인건비 등이 해수욕장보다 낮은데, 관심을 갖는 이도 없어 자격증 보유자는 커녕, 그저 숫자만 채워 현장을 지키도록 하는 형편이다. 강진군은 올해 물놀이장(석문공원·초당림·브리랜드) 안전관리요원 28명을 선발하면서 아무런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당초 자격증 소지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게 채용 공고를 올렸더니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결국 규정을 바꿔 공지했다는 것이 강진군 설명이다.

광주시 북구 시민의숲 물놀이장도 안전관리요원 10명을 채용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2년 이내 응급처치교육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라는 자격 요건만 내걸었다. 광주시는 광산

구 임곡교 다리 밑 하천에서 근무할 안전관리요원 4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영암군의 경우 올해부터 전남도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 점을 감안, 영암 기찬랜드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에서 인명구조사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꿨다.

안전 전문가들은 해수욕장·워터파크·수영장과 달리 하천, 계곡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법 조항 자체가 없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전남 각 시·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서는 모두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으로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력자, 관련 교육목 이수자 외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내걸고 있다. 사실상 자격,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안전관리요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당장 전남 지자체 각 계곡의 안전관리요원도 다수가 고령층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상황이다. 광양·곡성·구례 등 계곡 안전관리요원은 20~30대 지원자가 전무한 상태로 50~60대 주민들로 선발됐다. 특히 곡성의 경우 요원 총 10명이 모두 60대 이상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자격증 요건을 갖춰야한다면 안그래도 적은 지원자가 급감, 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계곡 관리요원들은 직접 구조하는 활동이 아닌, 위급 상황 시 로프를 던지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역할만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자격 없는 민간인이 안전관리를 맡으면 책임도 권한도 없어 위험 상황 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엄격한 안전관리 시험을 요건으로 내걸고 있고, 일본은 계곡 등지에서 인명구조 자격인증을 필수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도 관련 지침이나 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옷가지 잔뜩 덮인 에어컨 전선 “火르륵”

열 축적되며 화재...무안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로 45명 대피

무안군 청계면의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불이 나 45명이 대피했다.

13일 무안소방에 따르면 전남 오후 1시 50분께 무안군 호남고속도로 2단계 6공구 공사현장사무실 부지 내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으며, 거주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등 45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피한 노동자들은 인근에 마련된 내국인 숙소에 임시 거주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샌드위치패널 구조 단층 건물 1동

(564㎡)이 전소되고 소방서 추산 815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전기 배선에 옷가지를 쌓아둔 상태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작동하자, 전기 배선에 열이 축적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실내운동하며 더위 탈출 12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실내 체육 시설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건진법사, 검사 인사 청탁 받은 정황 포착

특검, 문자메시지 기록 확보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현직 검사와 관련한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씨가 윤석열 정부 초기 '브로커' A씨로부터 검사 B씨에 대한 인사 청탁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문자에는 B 검사의 이름, 생년월일, 당시 직책과 함께 "양청 드립니다"라는 극존칭의 청탁 표현이 담겼다고 한다.

다만 B 검사가 A씨에게 직접 청탁을 부탁했다거나 전씨가 청탁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자는 앞서 건진법사 인권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포렌식 기록을 비롯한 전씨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특검팀에 넘겼다.

B 검사는 여전히 현직 신분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A씨가 이러한 문자를 보낸 경위와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활용해 실제 검찰 인사에 개입한 게 아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직 인사 청탁이 가능했던 '뒷배'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인식했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사건'을 명시한다.

전씨는 2018~2022년 지방선거 때 실제 국회의원들을 통해 공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전씨 휴대전화에서 영남 지역 출마 예정자 최소 5명의 공천을 부탁하는 문자가 발견되면서다.

전씨의 법당에서는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검팀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전씨가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오월단체들 “조직적 5·18 왜곡 계획한 리박스쿨 처벌하라”

'리박스쿨이 조직적인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 활동을 계획했다'는 문건이 확인된 것과 관련, 5·18 관련 단체들이 정부 등에 관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리박스쿨'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국회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 등을 통해 리박스쿨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며 전씨의 명예 회복, 5·18 단체 현황조사, 5·18 유공자 명단공개 운동 전개 등을 계획한 사실이 확

인됐다"며 "군함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을 학살한 역사의 죄인인 전씨를 찬양하고 5·18을 왜곡한 악질적인 '교육 내란'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정당, 국회, 정부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역사왜곡 세력을 단죄하고 국민분열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를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을 밝히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향후 5·18을 비롯한 역사왜곡을 한 인물이 다시는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 을) 의원은 지난 10일 리박스쿨 내부에서 공유되던 '전두환 명예회복 현안문제연구회 결성 추진 TF 3차 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리박스쿨 관계자들은 지난 2023년 2월 3일 '전두환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한 5·18 및 김대중 살체 바로알리기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5·18 관련 단체를 현황조사하고 '극우 노골적 지원원 씨'가 쓴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등 책을 읽는 독서교실을 열고,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가처분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등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재 기자 yjyou@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앱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5타경 50909	1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30-15 165㎡	임야	13,530,000 13,530,000	
2025타경 51051	1	여수시 돌산읍 신북리 산460 8727㎡ [공유자전]	임야	23,508,800 23,508,800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2025타경 51063	1	여수시 돌산면 조화리 795-2 1372㎡	답	186,592,000 186,592,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4타경 53239	2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515-13 506.1㎡ 동소 1515-12 539.2㎡ 제1외 관경1식 여수시 소라면 노촌길 38 단층 84.78㎡ 제1외 창고등348.2㎡	대 대 단독주택	306,805,880 306,805,880	2024타경976 [중복] 1. 일괄매각, 제1외 건물포함
2025타경 50053	1	여수시 미평동 520-4 154㎡ 여수시 소정길 26-1 단층 24평3층6각 부속건 물 단층 광 8층 1차 제외 보일러실2.0㎡	대 단독주택	160,420,000 160,420,000	일괄매각, 제1외건 물포함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4타경 5155	2	순천시 우석로53, 3층 302호 190.35㎡	탁구장	151,000,000 151,000,000	
-------------	---	----------------------------	-----	----------------------------	--

● 공고된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개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가매수인인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이 불허될 때에 한하여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매각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금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2025. 7. 28.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2025. 8. 4. [월] 16:00
4. 매각장소: 순천시청 제108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하여 기일입찰방식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인수요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발급한 문서 [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서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공로 제출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인인인과 차순위매수인인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자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총결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매각결정일 전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 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전액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소유권이전 등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본제와 지방공과세를 납부한 후 등본제영수증 및 등본제영수증 수령증을 첨부하고, 국민주택대관변경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주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있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용자 등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민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무리없는 민사집행 [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에 미납될 때에 한하여 매각허가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문서 제출을 받고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인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전까지 차주자, 차주자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⑨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서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즉시 그 중에 사정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공서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물건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구형근